

이낙연 메시지에 친명-비명 '신경전'

〈전 국무총리〉

정치 복귀 행보에 나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국무총리)가 연일 메시지 수위를 높이며서 계파 간 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 회동 여부를 두고도 물밑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일 광주 5·18민주묘지와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잇달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안팎의 위기에 부딪혀 있고,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다며 '불행에도 정부는 무엄한 데다 폭주하고 있는 데다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몸 담고 있는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나 많이 미흡하다"며 "당이 진정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회의를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라며 "혁신은 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의 이번 호남행은 귀국 후 첫 지역 일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부터 2박3일간 고향인 전남 영광과 광주를 잇달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정치적 기반인 광주의 마지막 공식 일정에서 나온 이 대표의 작심 발언을 놓고 친명계에선 불편한 기류가 흐른다. 이 전 대표 발언을 확대 해석하지 않겠다면서도 정파적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며 마뜩잖아 하는 분위기가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당 지도부 관계자는 뉴스사와 한 통화에서 "그렇게 발언하는 이 전 대표 본인은 전 정부의 부동산 실책 등에 사과라도 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전 정부 국무총리이자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 전 대표가 아니라, 공천 지분을 확보하려는 계파 수장 정도로 스스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며 "이 대표 체제를 지적하고 현 지도부와 싸우기보다는 윤석열 정권을 일순 위 투쟁 상대로 삼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민주당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가 광주 북구 운동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전 총리, "민주, 국민 눈높이서 혁신해야"

친명계 "尹정부와 대립각 세워라" 직공

전·현 대표 회동 놓고도 양측 줄다리기 '팽팽'

특정 계파로 분류되지 않는 또 다른 의원도 "이 전 대표가 현 체제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 윤 정부와 각을 세우는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봤다.

이 전 대표 메시지를 확대 해석하지 말자는 신중론도 있다. 한 친명계 중진은 "이 전 대표가 늘 해온 원론적인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봤다"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 전 대표와 이 대표 간 회동을 놓고도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다. 친명계는 양측 만남을 독촉하며 회동 일정 임박했다는 전망을 내놓는 반면, 친낙(친이낙연)계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

다며 속도 조절에 나선 분위기다. 이 전 대표가 이 대표와 회동할 경우, 시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와 문재인 대통령 예방 이후가 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현재 경남 김해 노 전 대통령 묘역과 양산 평산마을 문 대통령을 방문하는 구체적 일정을 놓고 조율 중이다. 이번 주말에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와의 회동은 빨라도 다음주로 넘어갈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 측은 "양측 회동 일정을 이미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며 "순서상 문 대통령 예방 직후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에선 온도 차가 감지된다. 이 전 대

표 측 관계자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양측이 당장 만날 것처럼 (친명계) 압박하는 모양새 자체가 불편하다"며 "지금으론 회동 여부는 미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 후 정치적 양극이 풀리지 않은 이들 중 누가 먼저 손을 뻗어야 하는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이 팽팽하다

한 친명계 인사는 "당대표 신분인 이 대표에 비해 윤신이 자유로운 이 전 대표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반면, 친낙계 또 다른 관계자는 "패자가 손을 뻗는 상황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 손을 내미는 쪽은 승자여야 한다"며 이 전 대표 측 제스처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친낙계 운영진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서 "우선 두 분 사이 신뢰가 복원 돼야 한다"며 신뢰 회복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사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 많다”

문 전 대통령,尹정부 대북정책 직격

“남북 대화·외교 노력 없이 안정적 평화 얻기 어려워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
외교사 획기적 대전환”

尹 ‘반국가세력’ 발언
통일부 인식 비판 해석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직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쓴 ‘평화의 힘’을 소개하며 “무척 반가운 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평화관 평화를 위한 힘 없는 노력, 성과와 한계, 성찰 등에 관해 언젠가 제가 회고록을 쓴다면 담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며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적대 해소 노력과 지정학적 환경을 유리하게 이끄는 외교 노력 없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평화를 얻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점에서 공산권 국가들

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랄까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라고 결단이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전했다.

그는 “그럴 때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외교도 증진됐다”며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해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3만불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 때였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며 “이처럼 확연히 비교되는데도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한 데 이어 ‘통일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질서에 입각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나왔다.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사

“전주지역 쓰레기 불법 투기 강력 근절 대책 마련해야”

김윤철 전주시의원, 5분 발언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1689건 단속... 543대 CCTV 통해 잡아낸 불법투기 단 10건”

전주지역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법투기 쓰레기가 거리 미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시민 건강 문제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주시의회 김윤철(총안, 노송, 풍남, 인후3동) 의원은 3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정도시 전주의 또 다른 얼굴인 쓰레기 불법투기의 만났을 고발하고, 불법투기 없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초강도의 대응 방침을 시급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쓰레기 불법투기를 1,689건 단속했으나, 543대의 CCTV를 통해 잡아낸 불법투기는 단 10건에 불과하다.

또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 과태료가 100만원에 이르지만 실제 처리비용 역시 이에 버금간다는 점을 악용한 사업주는 단속을 카메라를 피해 교묘하게 사각지대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해다수 시민은 분리수거 방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지만 고질적 불법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은 건설 폐기물 등 위험요소가 있는 쓰레기까지 버리다



보니 시내 곳곳이 쓰레기로 난장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해 이제는 일방백제 방식으로 뿌리를 뽑아내야 할 시기”라며 “우선 CCTV를 전주소사해 작동 여부 점검과 시설 보강은 물론, 사각지대 발생으로 불법투기 쓰레기장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 식별가능한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속을 최대한 강화해 불법투기자를 반드시 색출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신고에 의존할 것이라 아니라 노인일자리 단속반을 확대해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예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정 기간 언론매체를 통한 투기 방지 홍보를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수거업체의 근무태도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옥기기자

전북교육 학력 정책 대안 모색

진형석 도의원-전북교사노조, 공동토론회 개최

전북교육의 학력 정책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3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전북교사노조(제이엡) 정책자 위원장과 공동으로 전북도교육청 창조미래관 3층에서 전북교육의 미래와 학력이라는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북교육의 미래와 학력이라는 주제로 전·광주교과 총장 박남기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전북도교육청의 정책과 학력에 대해 전라북도교육청 이한운 중등교육과 장학관의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교육정책연구소 김태훈 연구위

원의 학력정책(신장) 국내외 사례 소개와 현장 교사들을 대표해 선경 전주 우전초등학교 교사가 교사들의 생각담기라는 주제로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들었다.

진형석 의원은 “전북교육은 그간 학력신장과 관련한 공론화 장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기초학력을 기반으로 미래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전북교육청의 정책과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라 현장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판단했다”면서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장 교사들이 바라보는 전북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도교



진형석 전북도의회 의원이 3일 전북교사노조와 공동으로 전북도교육청 창조미래관 3층에서 “전북교육의 미래와 학력”이라는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육성이 충분히 수렴해 전북교육 특히, 학력신장과 관련한 적극적인 정책이

/김재훈기자

김제시의회, 7월 정례 의원간담회 개최

시 물관리 기본조례안 등 조례안·기타 안건 논의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지난 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7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열어 조례안 5건, 기타안건 8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제시 물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해 심도깊은 의견이 오갔다. 문 의원에 따르면 김제시 물관리 기본조례안에는 김제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물을 마시고 향유할 수 있도록 맑은 물을 확보·공급하고 생태계 유지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을 위해 통합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담았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상하수도와 같은 식수 공급과 확보, 관리계획 뿐

아니라 물 재활용, 가뭄대책, 생태계 유지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을 위해 포괄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조례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저수지 저류시설의 관리 및 가뭄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과 지원 등 구체적인 근거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와 건설과 등 유관부서와 적극적인 업무연락을 통해 세부 내용을 협의하여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내용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 내실있는 조례안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다듬어 빈틈없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락도 기자

고창군의회, 제9대 의회 개원 1년 기념행사

고창군의회의회(의정 임정호)는 3일, 3층 본회의장에서 군의원과 심덕섭 고창군수, 의회사무과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고창군의회 개원 1주년을 기념했다.

기념에 앞서 의원들은 1층 소회의실에서 월례 의원 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간 고창군의회의 성과와 발전추세를 되돌아보는 개원 1주년 기념, 의정활동 영상물을 시청했다. 그리고 쉽 없이, 소중하게 활동해 온 영상 속 장면 하나 하나를 떠올리며 군민과 함께한 지난 시간에 대한 소회와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이어 3층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여 떡케이크 커팅, 기념촬영을 끝으로 조촐한 개원 1주년을 마쳤다. 임정호 의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1년



동안, 제9대 고창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신 고창군민과 보다 나은 고창을 위해 함께 뛰여준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고창군의회는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더 귀 기울이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정행정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항상 사랑받고 신뢰받는 주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3일 제 25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익산시가 올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게 된다. 또한, 익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5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본회의 직후 회의를 열어 유재구 위원을 위원장으로, 김순덕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내년 8월 30일까지이며, 제253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익산=이재훈 기자